

이미 알려진 내용들...기대 못 미친 5·18 진실 규명

5·18진상조사위 출범 2주년 보고 내용 보니

50여명 교도소 암매장 진술...첫 발표 동시다발적 진행 밝혀져 진돗개 하나 발령·전두환 관여 등 이미 공개된 것 재언급 그쳐 "언제까지 조사만 할거냐" 지적...실체 뒷받침할 증거 확보 시급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50여명의 시신을 광주교도소 일대에 암매장했다는 계엄군 진술이 나왔다. 41년 전 5월 20일 계엄군의 시신을 상대로 한 첫 충격은 광주역뿐 아니라 광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분석도 당시 총상을 입은 부상자 기록을 토대로 드러났다. 광주교도소 일대 암매장 증언은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지만 구체적 숫자가 제시된 것은 처음으로, 실체가 드러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진상 규명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출범한 지 2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보고회' 내용으로는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발표명령자와 암매장, 행불자 등 5·18의 진상규명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사실적 접근'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27일 출범 2년을 맞아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출범 이후 2년 간 조사결과와 향후 조사진행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조사위는 ▲발포명령 체계 ▲전두환씨 관여 여부 ▲5·18 당시 첫발포 ▲민간인 학살 ▲가(암)매장 ▲무기고 피습 ▲북한특수군 침입 ▲계엄군 성폭력 사건 ▲헬기사격 ▲신군부 핵심 인사조사 ▲추가법정조사과제 등으로 나눠 2년간의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날 '광주교도소에서 50구 이상이 가(암)매장 됐다'는 증언과 1980년 5월 20일 첫 발포가 광주역 뿐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는 내용을 최초로 밝혔다.

당시 3공수부대 방문전조사 과정에서 교도소 일원에 가(암)매장을 지시·실행·목적 했다는 계엄군 54명으로부터 최대 50여구의 시신을 암매장 했다는 진술(중복 제외)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1982년까지 보안대 관련자들이 광주교도소를 방문해 가(암)매장의 상태를 확인했고 4개의 팀으로 구성된 시체처리반이 가(암)매장된 시체를 옮겼다고 보고했다.

또 광주역 일원 외에도 인근 지역인 대인동, 동명동, 신안사거리, 광주시청 등 최소 7개소 이상의 지역에서 사격, 또는 피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5·18보상심의자료내 상이자 관련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그동안의 유전자 진행된 조사로 고(故) 양창근 열사의 시신이 무명 열사 묘역에 묻혀있는 점도 확인했다. 기존 양창근 열사 묘역에 묻혀 있는 시신에 대한 유전자조사를 실시해 신원을 밝힌다는 게 조사위의 계획이다.

조사위는 발표명령 체계의 실체, 비무장 민간인 살상 사건 등을 밝히면서 당시 전두환씨가 광주진압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Good Idea(굿 아이디어)'라고 발언한 사실, 5·18 당시 '진돗개 하나' 발령 사실 등도 공개했다.

송선태 위원장은 "내년 6월경 대부분의 조사가 마쳐질 것으로 보이며, 일부 조사는 10월이면 끝날 것"이라며 "내년 6월에는 조사대상에 대한 청문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암매장 여부와 시신 상대 총격 장소 등은 구체적인 증거나 조사결과가 아닌, 당시 계엄군의 진술을 추가 확보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기는 성급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대국민 보고회 내용이 과거에 이미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 또는 과거에 발표된 조사결과에서 확정된 것을 재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점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진돗개 "하나" 발령

20 서면 처리부지일 197명, 현존 유족 27명, 전향적향 307명, 돌격사령관 2명, 조교 2명, 계 3명, 1인 1명, 공문서 3명, 2명, 조교 2명, 부에서 출동해오 조교 2명, 계 2명, 20명, 2명, 계

1. 집행시간: 00:52:10:00 (00:15 종료)

2. 표적사명

1. 주경명 (사령관)

2. 전향수용실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3. 집행결과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기갑학교 부대사'에 나오는 진돗개 하나 발령. <광주일보 자료사진>

조사위가 출범한 지 2년이나 되는데, 최초 발표명령자, 암매장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최우선적 진상 규명 방침에 대한 최우선적 진상 규명 방침을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조금이나마 진전된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보고회에서 발표명령체계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진돗개 하나' 발령조치는 지난 2017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했다.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현지 부대 방문 조사과정에서 서류상에서 발견한 1980년도 '기갑학교 부대사'는 진돗개 하나 발령에 따른 기갑학교의 조치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진돗개 하나는 군의 방어 준비태세에서 최고 수준의 대응으로 전투태세를 의미한다.

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광주진압작전에 관여한 기록도 지난 2019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다. 당시 보도된 언론 내용에는 "1980년 당시 2군사



27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2주년 대국민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령부의 '광주권 총정적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문건 5월 23일자 기록을 보면 '閣下(각하)께서 "Good idea(굿 아이디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다'면서 해당내용에 대한 문건 사진까지 이미 공개됐다.

결국 이미 확인되거나 공개된 내용을 대국민 보고회에서 다시 언급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광주·전남일원 무기고 피습사건의 북한군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발표 내용도 마찬가지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계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전 시민군의 무기탈취 및 선제발포설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던 나주 금성동 파출소의 무기 피탈 시간은 당일 정오가 아닌 오후 2시께 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내용도 지난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결과를 내놓은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에서 "최초 무기탈취 피탈은 5월 21일 오후 1시 30분께 나주시 남평지서에서 발생했고...(중략) 5월 21일 오후 1시 전까지는 시민군의 총기발사는 없었다"고 판정된 바 있다.

이외에도 북한특수군 침입은 없었다는 조사결과와 저격수 배치, 민간인 학살 등은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다시 발표한 것에 그쳤다.

나머지 계엄군 성폭력 사건, 헬기사격, 신군부 핵심 인사조사, 추가법정조사과제 등에 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해 조사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내용 이외에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밝히지 못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마지막 진상 규명이라는 점에서는 2년 동안의 조사위 활동은 국민들과 지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 충분한 조사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5·18유족회장은 "언제까지 조사만 할거냐. 2년의 기간이 지났으면 일정부분 조사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m 음주운전' 대학생 이례적 법정 구속 왜?

혐의 부인, 영향 미친 듯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산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2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초범인 점을 반영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제외하면 초범, 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배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같은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에 대해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와 달리 이 운전자는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내내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광산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들어 운전한 것으로 봤다. A씨는 CCTV 영상으로는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목격자와 닮은 점이 있었을 점을 내세워 목격자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특수학교 중증장애인 폭행 방지 대책 마련을"

광주 장애인권익보호단체들 촉구

광주의 장애인 권익 보호 단체들이 반복되는 특수학교 내 중증장애인 폭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27일 광주 모 특수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과 강원 등 전국에서도 특수학교 장애인들의 폭행 사건이 있었다. 공통점은 장애인 학생 중에서도 중증인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의소소통 능력이 떨어져 진술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벌어지고 있어 부모들은 더욱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몸에 난 상처와 행동 변화에 대해 학교 종사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학교 측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엄벌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특수학교내 CCTV 설치, 사회복무요원 관리방안 마련,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북부경찰은 최근 광주 북구 모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가 20대 장애인 남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족과 학교 관계자, 피고발인 등을 조사해 폭행, 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